

재정 조기집행? 현장은 돈가뭄

행정 장벽 여전히 첩첩... 정부 말뿐인 지원 광주·전남 배정 4조8천억원 10%도 안풀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 상반기에 자치단체의 재정 60%를 조기 집행하도록 광주, 전남 등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으나, 예산을 전폭 지원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업비 신속 집행을 위해서는 공사, 용역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지만, 정작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아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맞춰 상반기에 1조7천82억원(전체 재정의 64%), 전남도는 3조800억원

(전체 재정의 60%)을 책정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경우 현재까지 정부 지원예산은 모두 1천279억원, 전남도는 3천869억원에 그쳐 대규모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시는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춰지자 현재 616억원을 공사, 용역, 물품구입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도 전체 조기집행 대상 예산 중 5.7%인 2천926억원만 지급한 상태다.

또 재원 투입 효과가 높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려 해도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규 사업 추진의 경우 토지매수와 관련, 소유주와 협상이 결렬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 수용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 최장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규정대로라면 상반기 내에 목표로 한 재정의 조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또는 국고보조금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반드시 거처도록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린다.

공사 공정에 맞춰 지급토록 규정돼 있는 사업비 지급 방식도 장애 요인이다. 공사 추진과정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 공기차질이 빚어질 경우 공사금액을 지급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 촉구에 따라 공사를 서둘러 집행하려고 무리하게 공정 단축을 주문할 경우 부실공사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도 행정안전부는 재정 조기 집행목표를 달성한 자치단체와 공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 자치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조기 집행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 지원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재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 각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과일 기부천사'가 보낸 500상자의 배를 불우이웃에 전달하기 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이번엔 '과일 기부천사' 광주 북구청에 배 500상자 기탁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광주의 '과일 기부천사'가 또 다시 배 500상자를 기증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22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광주에서 과일도매업을 하는 A(37)씨는 이날 배 500상자(500만원 상당)를 구에 기탁했다. A씨는 지난 달 11일 1천만원 상당의 굴 1천상자를 1t 화물 트럭에 싣고 구청 광장에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에 전해 달라"는 말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진 주인공이다. 또 추석을 앞둔 2007년 9월 초에 배 570상자(57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A씨는 과일도매업을 하면서 남은 일정 수익금으로 과일을 구입,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왔다.

A씨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과일도매업을 하다가 실패한 뒤 재기에 성공, 당시 도움 받았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같은 선행을 베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A씨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배 570상자(57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날 희망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 등에 나눠줬다.

한편, 지난 19일과 18일에도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불우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남·여 의류 1천 500벌과 신발 300켤레를 북구에 기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시민·정치권, 지역차별 구조조정 화났다

지역경제 회생 특단 조치 촉구

정부가 대주건설과 C&중공업 등 호남권 중견업체들을 퇴출기업으로 선정할 때 대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대표 방철호)은 22일 '이명박 정부는 광주·전남을 외면하는가'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지역 차별적인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2면〉

이들은 성명에서 "협력업체 수가 많은 삼성건설과 대한조선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고 대주건설과 C

&중공업이 퇴출기업으로 최종확정됐다"며 "이는 협력업체와 입주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지역 기업들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결정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견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역 기업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를 경우 이명박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성토도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지

역의 중견기업들이 퇴출 대상이 됨에 따라 가뜰이나 열악한 광주·전남의 경제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이번에 퇴출된 기업이 대주건설과 C&중공업 등 모두 호남지역 기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업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이번 건설사와 조선사의 퇴출로 1천여명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출도산과 종업원 8만여명의 대량실직 사태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협력업체 보호에 나서고 금융권도 해당 기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강추위·큰 눈 귀성길 비상

설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힘든 귀성길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귀성길에 시작되는 23일은 광주·전남지역에 강추위와 함께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된다"며 귀성객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예상 적설량은 광주·전남에 1~10cm.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영상 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람이 강

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4일도 광주·전남지역에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영하 6도~영하 1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23일과 24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을 찾는 귀성객들은 여객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교통편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낮부터는 눈과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설인 26일은 눈은 내리지 않고 구름만 끼겠으며, 이날 광주의 기온은 영하 6도~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기상청은 "23일 새벽부터 서해남부 번바다에 풍랑 예비특보를 시작으로 대설 및 강풍 예비특보가 예상되니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